

지자체 해양쓰레기 수거예산 최근 5년동안 3654억원 증가

전북지역은 2017년 1억9300만원에서 지난해 15억원으로 예산 증가율 가장 높아 민주 윤준병 의원 “해양쓰레기 양 급증... 지자체 부담도 커져 정부 차원 대책 필요”

어업은 물론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할 양이 최근 5년 동안 54만톤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수거·처리한 해양쓰레기는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양쓰레기가 증가하면서 지자체는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으로 국비와 매칭된 지방비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자체 자체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음·고창)이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거한 해양쓰레기 총량은 54만5,549톤이었다.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5년 평균 11만톤으로 1톤 트럭 11만대에 분량에 달하며, 2021년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12만736톤으로 2017년(8만2,176톤) 대비 46.9%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수거·처리된 해양쓰레기 중 해양환경공단·한국어항어촌공단·한국수산업 등 공공기관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5년간 5만9,170톤으로 전체 10.8%에 불과했고, 나머지 89.2%에 해당하는 48만6,379톤은 지자체에서 수거·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전남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5년간 총 15만 8,839톤으로 전체 29.1%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주 7만 2,325톤(13.3%), 경남 6만 4,780톤(11.9%), 충남 6만 1,195톤(11.2%) 순이었다.

한편, 전체 해양쓰레기의 90%를 수거·처리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관련한 해양수산부의 보조사업에 대해 국비와 매칭되는 지방비뿐만 아니라, 자체 예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도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예산을 보면, 2017년부터 2022까지 전체 시도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예산은 3,654억2,700만원이었으며, 5년간 3.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으로 국비와 매칭된 지방비를 포함한 해양쓰레기 처리 예산은 5년간 5.7배 증가했으며,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을 제외한 시도별 해양쓰레기 수거 자체 예산도 같은 기간 2배 가 늘어났다.

특히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을 제외한 시도별 해양쓰레기 수거 자체 예산 증가율을 보면, 울산(2017년 4억3,100만 원-21년 3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모두 자체예산이 증가했고, 전북은 2017년 1억9,300만 원에서 2021년 15억원으로 5년간 7.8배가 증가해 자체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 4.5배, 충남 3.3배, 전남 2.9배 순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선박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어업 생산성 저감, 생태계 파괴, 대규모 수거·처리 비용 등을 발생시키는 만큼 해양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된 해양쓰레기는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해야 한다”며 “급격히 증가한 해양쓰레기 양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실제, 해양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으로 국비와 매칭되는 지방비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자체 예산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자체예산을 지원해 주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바다를 병들게 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함에 있어 정부가 수수방관하거나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군산형 일자리 사업 체질 개선 시급”

MPS코리아 투자 철회 에디슨모터스 악재 등 유치기업 문제 발생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의구심들이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환경복지위·장수)은 지난 18일 제395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사업 2년 차를 지나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 구상 당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산 11조 4,679억원, 부가가치 2조8,149억원, 취업 유망 36,889명으로 분석되며 경제회복에 대한 정면 및 청사진이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기대효과를 군산민들이 체감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한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 선정 이후 2년차가 된 지금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진행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최근 전기차 산업에 대한 국제 정세 및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해 사업추진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 방향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짚어봤다.

박용근 의원은 먼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문제와 관련해, 당초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MPS코리아가 지난해 돌연 사업을 철회한 이유와 현재 MPS코리아 측과 진행되고 있는 소송현황 및 전북도의 대응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문제 되고 있는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문제와 관련해 에디슨모터스가 지난해 쌍용차 인수자금 창구로 활용했던 에디슨EV 인수 시기와 전북도가 에디슨모터스에 100억원을 지급보증 한 시기가 비슷했던 점을 들어, 혹여 전북도에서 지급보증 한 돈이 주가조작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에디슨EV 인수에 흘러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 성과 측면의 문제에 대해 2022년 고용 계획인원은 310명이나 현재 63명만 채용됐고, 에디슨모터스와 대칭의 경우 단 한명도 고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현재 군산형 일자리 참여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산 배터리 등의 부품을 사

박용근 도의원, 도정 질의서

용하고 있고, 특히 에디슨모터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버스의 경우 국산 배터리 셀이 아닌 중국 중소기업의 배터리 셀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자회사를 통해 패키징만 거쳐 자사 전기버스 모델에 사용하고 있고, 중국산 차량을 반조립(SKD) 형태로 국내에 들여와 한국산으로 조립 판매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산둔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현재 MPS코리아와 진행중인 소송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며,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부채 증가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반에 비해 부채비율과 신용등급이 향상되고 있고, 지식재산권을 비롯해 다수의 자체 R&D능력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기업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에디슨모터스 문제와 관련하여 에디슨EV 인수자금 투입이 완료된 시점(7월9일)과 전북도의 지급보증 시기(7월30일)에 다소 차이가 있어 관련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향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범위 및 자금목적의 사용 등 사실이 발견되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경수 기자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지원 근거 마련

최형열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농산경위 심의 통과



전북도의회가 심각한 기후변화로 농업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통과했다.

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해당 상임위(농산경위 제외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30년 동안 기온이 1.2℃ 상승해 같은 기간 전 세계 상승 기온(0.8℃)보다

0.4℃ 높게 나타났다. 1973년 대비 2017년 연평균 기온은 제주권 1.14℃, 수도권 0.91℃, 전북권 0.63℃, 충남권 0.34℃ 상승해 기온상승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도내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작물 재배 능가 교육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기본계획과 육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3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식민사관·천박한 역사의식”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 정진석 국힘 비대위원장 사퇴 성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19일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들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최근 발언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이자 귀를 의심하게 하는 천박한 역사의식이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의원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일본과 항쟁을 한 수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있다”며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정치인의 민언과 정쟁을

일삼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원들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완용의 말을 빌린 새로운 이완용 버전이다”며 “제국주의 침략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이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 의원 37명의 의견을 모았으며, 성명서 발표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선 최소한의 반성과 사죄의 모습을 기대했으나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주시의회, 아동돌봄서비스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열어

전주시의회는 19일 이보순·장재희 의원이 아동돌봄서비스 정책 현황과 미래 과제를 주제로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아동돌봄서비스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전주대학교 김광혁 교수를 좌장으로 전주교육지원청 정지현 장학사,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 전주 시지역아동센터 노선덕 센터장, 전주 시 여성가족과 조현숙 과장, 이보순·장재희 의원이 개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자들은 긴급돌봄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아동돌봄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용돌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훈 기자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축! 전주매일 창간

2022년, 한전은 안전을 위해 한 걸음 천천히 가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안전을 갈수 있도록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갈수 있도록

작업 중에는 전기공급을 잠시 멈추고, 다양한 안전 장비를 개발하고, 모두를 살리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 모두를 지키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한전 한국전력을 창명해주는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2년부터는 전기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한전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한국전력은 고품질의 안전한 전기공급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